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학원 · 교습소 편]

2015. 12. 개정



행정자치부



교육부

목 차

I. 가이드라인 개요 1

- 발간배경, 목적, 구성, 활용 및 저작권, 적용범위 및 관련법령

II.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 4

- 개인정보 개념, 보호원칙, 법령체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위탁, 안전한 관리,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정보주체 권익보호 등 개인정보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III.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요령(학원·교습소 등) 26

- 학습자 개인정보 처리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이행, 퇴원 등)
- 직원·강사 개인정보 처리
(채용예정자, 재직자, 퇴직자 인사관리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공개·비공개 장소 운영, 열람·파기 등)

[참고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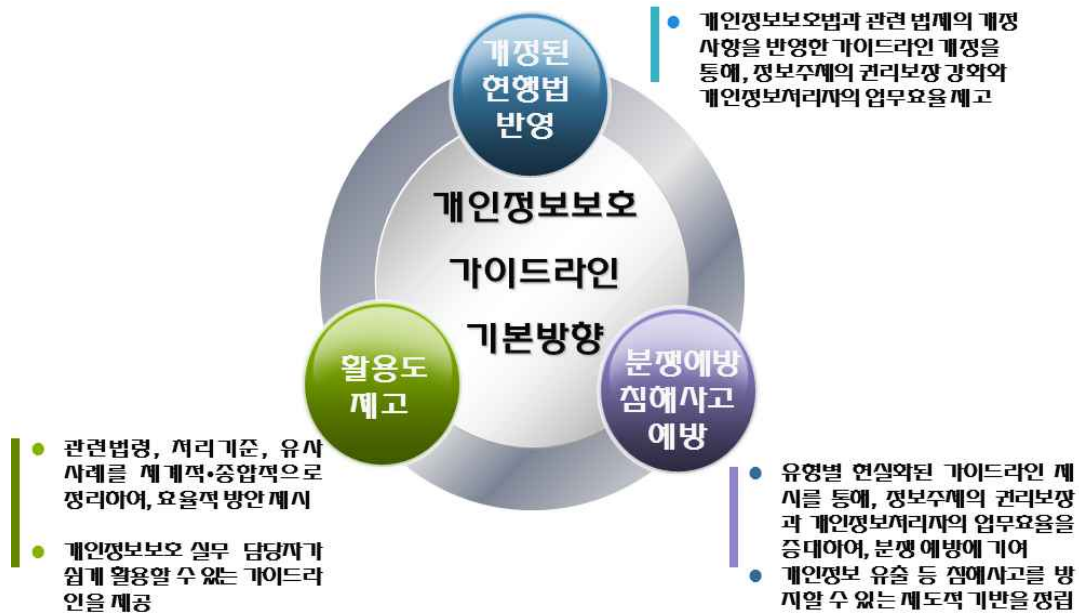
- 1. 이것만은 꼭! [필수조치 사항] 45
- 2. 참고자료(각종 서식 등) 46
- 3.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58

< 용어 설명 >

1. “학습자”란 학원, 교습소 등에서 교습을 받거나 학습·훈련을 위해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내부 의사결정절차를 통하여 수립·시행하는 내부 기준을 말한다.

I. 가이드라인 개요

1. 발간 배경 및 목적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 개인정보는 개인에게는 인권, 기업에게는 영업자산 및 사회활동의 기반, 국가에게는 신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증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 증가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12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 편)」 발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및 학원·교습소 관련법령 등의 개정 사항 반영 필요
- 학원과 교습소의 유형별 업무와 관련된 법령, 처리기준, 유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

2. 가이드라인 구성

- 학습자·강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가이드라인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개인정보의 개념 및 보호원칙
 -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위탁, 보관, 파기, CCTV 설치·운영 등
 - －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 보호요령 및 사례
 - 학습자 개인정보 : 모집광고, 상담, 입학원, 교습계약 체결·이행, 퇴원 등
 - 직원 및 강사 : 채용예정자, 재직자, 퇴직자 인사정보 관리
 - CCTV의 설치 운영 : 공개된 장소(복도, 접수대 등) 및 비공개 장소(강의실, 강사 대기실 등)
 - － 학원·교습소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개인정보피해 구제
- 학원·교습소의 상황별 질의응답(FAQ) 및 관계법령

3. 가이드라인 활용 및 저작권 표시

- 이 가이드라인의 저작권은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있음
- 개인정보보호 교육 목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인용, 편집 등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 －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 제목 및 저작권 보유기관 표시

* 출처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교습소편』 행정자치부·교육부(2015)

<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 >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14. 8. 7.) 반영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수집 불가)
-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 2016년 말까지 암호화 조치 완료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
처리자 : 2017년 말까지 암호화 조치 완료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 법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품 및 이익의 몰수·추징 제도 신설
 - 징벌적손해배상제도*·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16. 7 시행)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가능
 - ** 법원의 판결로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가능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사항 반영
 - 개인정보 파기 요령, 영상정보 보관 기간 등

II. 개인정보 보호 기본원칙

1. 개인정보보호 개요

①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의 범위 >

- 1) 자연인에 관한 정보
 -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
 -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음
- 3)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의 의미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다른 개인 정보의 종류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짐
- 4) 정보의 종류·형태 제한 없음
 - 문자·음성·부호·영상 등 정보의 종류나 형태는 제한이 없음

- 연령, 주소 등 개인에 대한 객관적 정보는 물론 개인에 대한 의견, 평가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주관적인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됨

＜ 개인정보의 예시 ＞

유형구분	개인정보항목
일반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가족정보	가족구성원들의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 전화번호
교육 및 훈련정보	학교출석사항, 최종학력, 학교성적,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상벌사항
병역정보	군번 및 계급, 제대유형, 주특기, 근무부대
부동산정보	소유주택, 토지, 자동차, 기타소유차량, 상점 및 건물 등
소득정보	현재 봉급액, 봉급경력, 보너스 및 수수료, 기타소득의 원천, 이자소득, 사업소득
그 밖의 수익정보	보험 (건강, 생명 등) 가입현황,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프로그램, 휴가, 병가
신용정보	대부잔액 및 지불상황, 저당, 신용카드, 지불연기 및 미납의 수, 임금압류 통보에 대한 기록
고용정보	현재의 고용주, 회사주소, 상급자의 이름, 직무수행평가기록, 훈련 기록, 출석기록, 상벌기록, 성격 테스트결과 직무태도, 취업일 · 퇴직일 등 근속기간, 휴가 · 휴직기록, 근무시간 기록 등
법적 정보	전과기록, 자동차 교통 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의료정보	가족병력기록,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IQ, 약물테스트 등 각종 신체테스트 정보
조직정보	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통신정보	전자우편(E-mail), 전화통화내용, 로그파일(Log file), 쿠키(Cookies)
위치정보	GPS나 휴대폰에 의한 개인의 위치정보
신체정보	지문, 홍채, DNA, 신장, 가슴둘레 등
습관 및 취미정보	흡연, 음주량, 선호하는 스포츠 및 오락, 여가활동, 비디오 대여 기록, 도박성향

②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처리요건에 해당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함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함.
-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함

(헌재 2005. 5. 26. 99헌마513등, 공보 105, 666, 672)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

< 개인정보보호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OECD 가이드라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수집 제한의 원칙
처리목적 범위 안에서 정확성 · 완전성 · 최신성 보장	정보 정확성의 원칙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명확화 원칙
필요 목적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이용 제한의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 안전성 확보	안전성 확보 원칙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처리방침 공개, 법 제30조)	공개의 원칙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정보주체 참여 원칙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 실천, 신뢰성 확보 노력	책임의 원칙

③ 법령의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므로
 - 학원·교습소 등을 규율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 * 단,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규정으로 개인정보처리에 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우선적 적용에서 제외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기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 수집 요건

- 학원·교습소 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전에 다음의 수집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학습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는 방법 >

- 학습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1) 수집·이용 목적 2) 수집 항목 3)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 * 만14세 미만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학원법에 따른 수강생대장 및 체육법에 따른 회원관리대장 작성 등)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 성명, 연락처, 교습과목 등은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정보에 해당됨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원·교습소 등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 이 경우 학원·교습소 등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최소한 수집 원칙과 입증책임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학원·교습소 등이 부담(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학습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③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지 확인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등

-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수집 사유가 있는 경우 필요 최소의 범위에서 별도 동의를 얻어 수집·이용(주민등록번호 제외)
 - * 별도 동의란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외에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받는 것을 의미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이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만 처리가능(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2)

<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사유 >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위 2개 사유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금지되는 개인정보 수집

-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금지
 -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변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제3자 제공 요건

-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학습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제3자 제공을 위해 동의받는 방법 >

학습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국외의 제3자 제공도 동일)

1) 제공받는 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제3자 제공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
- 만일 법령에 근거가 없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면 정보주체로 부터 별도의 동의 필요
- *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

③ 금지되는 개인정보 제공 행위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위탁 방법

- 학원·교습소가 습자 수강료 납부 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함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및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 준수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표준 위탁계약서(서식)은 붙임 4 참고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의 구분 >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처리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
예측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관리·감독책임	위탁자 책임(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② 위탁 및 처리방침에 관한 사항 공개

- 위탁업무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를 학습자 등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개

③ 위탁자의 교육 및 감독 의무

- 위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여야 함

④ 손해배상 책임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사용자의 소속직원으로 봄

< 수탁자의 의무 >

개인정보 처리업무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관하여 수집·이용, 제공, 보관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기본원칙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개별 구체적 사안에서 다음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용·운영하여야 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다음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유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해당 기기를 임의 조작할 수 없음

③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또는 접수대) 등에 공개하고
-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음

⑤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 단,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공 가능

- 영상정보는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함

※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보관 기간을 준수 한 후, 기간 종료 후 즉시파기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음
 -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등은 파쇄 또는 소각
 -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업무위탁 규정 적용

⑦ 정보주체의 자기영상정보 열람권 보장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열람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⑧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표준개인정보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①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관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개인정보보호책임자지정 등) ▶ 접근 권한의 제한
기술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 암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번호를 보관 시에는 반드시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물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 개인정보가 포함된 USB의 반출·입 통제 ▶ 개인정보의 파기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예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업종에 따라 상시 근로자 10인 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접근 권한의 관리

- 학원·교습소 등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방법 >

-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 *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업무 담당자별 권한이 동일하여 사용권한의 차등 부여가 어려울 경우, 담당자별로 ID 부여
- 개인정보취급자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스템의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취급자별 사용자계정이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관리
-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과 무인가 접근 차단을 위한 접근권한 관리 필요

▷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또는 바이오정보** 등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번호 : '16년 말까지
 -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번호 : '17년 말까지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
- 학습자 등의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지문 등)를 저장하는 경우
 - * 특히, 비밀번호 저장 시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
-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로서 위험도 분석 결과 암호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

〈접속기록 항목 예시〉

필수 기록 항목	설명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접속자 IP주소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의 유출·위조·변조·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악성 프로그램 등의 감염을 예방·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방법〉

-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 시나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 또는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기타

-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 누설 금지(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학원·교습소 등은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게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총괄 및 다음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 및 권한 >

- (자격)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거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개인정보 처리 업무 경험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자)
- (권한)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음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지 않음

바. 파기

-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목적 달성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해당 개인정보 파기
 - 파기방법 :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
 - ※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파기”의 의미 >

- 전자적 파일은 사회 통념상 현재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 활용
- 인쇄물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로서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 외인 경우 :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하되, 해당 개인정보(또는 파일)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함

[별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원 또는 교습소의 장부 및 서류(제16조 관련) <개정 2015.1.16.>

장부 및 서류명	서식	보존기간
1. 원칙(학원만 해당한다)		준영구
2. 학원설립·운영등록증(학원만 해당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준영구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한다)	별지 제17호서식	준영구
4. 삭제 <2015.1.16.>		
5. 현금출납부		5년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별지 제24호서식	5년
7. 수강생 대장	별지 제25호서식	3년
8. 직원 명부	별지 제26호서식	계속
9.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년
10.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3년

사. 정보주체 권익보호

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고지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학습자의 요구가 있으면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함
 -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및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 다만,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개인정보 열람

- 학습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가능

③ 개인정보 정정·삭제

- 학습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정정·삭제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법령에 따라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야 함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 학습자 등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할 경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 *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학원·교습소 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 부서 및 연락처

⑥ 피해 구제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피해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분쟁조정 및 집단분쟁조정
- 권리침해 중지·정지 요구를 위한 단체소송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16. 7 시행)
 -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가능
 - ** 법원의 판결로 3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가능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

구분	집단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49조)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제51~57조(제7장))
주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 법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 민간단체
청구범위	○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 신청	○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행위 금지·중지 청구 ※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 필요
허가요건	○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50인 이상일 것 ※ 소송 제기, 피해보상 합의 등 제외 ○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에 흠결이 없을 것
효력범위	○ 판결의 효력은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에게 미침 －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권고 가능 ※ 동법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는 기각판결에 대해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인용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 없음 ○ 원칙적으로 단체소송의 효력은 단체 회원, 단체에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위임한 자, 단체 자신으로 제한됨

【참고】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일 반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70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민감정보 처리요건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고유식별정보 처리요건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제24조)	
	선택적으로 동의사항에 대한 미동의 또는 미동의를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제22조제4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제2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0조 제1항)	
	법령근거 등 처리허용 요건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제24조의2)	
	동의를 받는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제22조제1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75조제3항)
수 집 · 이 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59조제1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72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개인정보의 수집 요건을 위반하여 수집한 자(제15조제1항)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1항)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제22조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금지 장소(탈의실·목욕실 등)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한 자(제25조제2항)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제3항)	
	법령 근거 등 주민번호 처리요건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제24조의2)	
제 공 · 위 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8조,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업무 위탁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6조제3항)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24조의2 제2항)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시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제26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26조제2항)	

구분	주요 내용	처벌 및 벌칙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59조제2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1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제59조제3호)	몰수·추징 (제74조의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제5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72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이용한 자(제60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73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24조의2제2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요건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제25조)	
	개인정보 유출 시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제34조제1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30조제1항·제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제31조제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제73조) 몰수·추징 (제74조의2)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25조제4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 하지 아니한 자(제34조제1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제35조제3항)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에 따른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6조제2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3항)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제37조제4항)	
	행정자치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4조제1항)	
파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7조제1항·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제37조제3항)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제63조제1항)	
파기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제2항)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제21조제1항)	

Ⅲ. 학원·교습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요령

1. 학습자 개인정보 처리

< 주요 점검 사항 >

- 모집 광고 :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 활용 시 동의 확보
- 상담 및 입학원 :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관리 : 유·노출 주의, 안전성확보조치 준수, 제3자 제공 금지 등
- 퇴원 : 학습자 개인정보 파기

가. 모집광고

- 학습자 또는 강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학원·교습소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다만,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예시 : ‘본원 출신 000 **상 수상’, ‘XX고 000 □□대학교 수석합격’, ‘△△대 수석 졸업 강사 000 특강’ 등의 개인정보 활용 홍보는 본인의 동의 후 실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받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항목, 이용·보유기간, 정보주체의 동의 거부권 등 고지

나. 상담 및 입학원

<상담>

-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상담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

* 상담결과를 문서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 확보 필요

<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예시 >

- 피상담자 학습능력 판단 및 교습과정 추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재학여부, 소속 학교명, 계열(이과, 문과), 선수학습 내용
- 기타 학원·교습소에서 교습 관련 상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필요최소한의 정보수집임에 대한 입증책임은 학원·교습소에 있음)

- 학습능력 평가를 통해 입원 자격을 판단하거나 반 배치를 하고자 할 경우 필요최소한으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를 수집하여 테스트 실시
 - * 합격여부 및 반배치 결과는 학습자 및 친권자에게 직접 통보 또는 학원·교습소 등에서 개인에게 부여한 임시번호(접수번호 등)와 매칭하여 게시하는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노출에 주의
- 피상담자가 학원·교습소 등에서 교습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5일 이내에 상담내용 및 테스트 결과 파기
 - * 다만, 피상담자의 요청(수강계약 체결여부 판단 목적) 등으로 상담결과를 5일 이상 보존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 해당기간 동안 보관
 - * 상담결과 등을 홍보 등 타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목적, 이용항목, 기간 등에 관한 동의 필요

<수강계약 체결 및 이행>

- 법령에 의해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 * 관계 법령(예시) : 학원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 서식, 수강생 대장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교습과목)
- 수강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4호)
 - * 이 경우 필요최소한의 정보수집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학원에 있음.
 -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교습과목 등은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에 해당됨
- 수강계약을 위한 필수정보 외의 추가 서비스(심화·특별과정 운영, 진학지도, 맞춤형 컨설팅 등) 제공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하되 동의 획득 필요
 - * 만 14세 미만 학습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온라인을 통한 수강의 경우>

- 온라인 회원가입 : 회원가입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수집
- 수강 : 회원 가입 시 제공한 정보 중 계약 체결·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성명, 전화번호, 교습과목 등)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이용

- 미성년인 학습자의 지도를 위하여 친권자(학부모 등) 연락처 등을 수집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음(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5항)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 목적을 별도로 명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한다 하여 교습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없음
- 원칙적으로 학습자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은 금지(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제외)
- 법령에 영수증 등의 서식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규정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원칙에 따라 서식 마련 및 활용
 - *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교습비등 영수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참조
-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예시) : 납부자,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습과목

다. 개인정보 관리

□ 안전한 보관

- 학습자 등의 개인정보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공개, 주민번호 보관 시 암호화 등 실시
 - * 상시 근무인원 5인 이하의 학원·교습소 등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됨
 - * 학원·교습소 등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학습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

□ 제3자 제공 및 위탁

- 교습업무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경우 제3자 제공 금지 및 유·노출 주의

- 교재 또는 교구 판매처에 학습자의 동의 없이 학습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조항 위반
- 출결상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령 근거 또는 제3자 제공 동의 필요
- * 다만, 친권자의 요청에 의해 미성년자의 출결상황 등을 친권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친권행사를 위한 것이므로 미성년인 학습자의 동의 불필요

- 학습자의 개인정보처리 위탁은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

< 위탁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

- 수탁자의 인력 및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정도, 책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를 선정(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9조제1항)
- 보안시스템 설치현황(방화벽, 백신 등), 비밀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전산시스템 접근제어 등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

- *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수납처 등을 통해 공개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따라 학습자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권을 보장하여야 함
- 학습자로부터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및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는 참고자료 참조

라. 퇴원 및 개인정보 파기

- 학습자가 퇴원하는 경우, 교습을 위하여 수집하였던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는 것이 원칙(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되는 정보를 기존에 보관했던 파일에서 분리하여 보관

- * 예시)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등)에 따라 거래관계의 증빙 자료(영수증, 전표 등)는 5년간 보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수강생 대장 3년 등 별표에 따른 장부 및 서류 기록·유지
- 퇴원 이후 학습자가 수강 관련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내용을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
- * 이 경우에도 학습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습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 퇴원한 학습자에게 홍보·마케팅을 위한 안내물(이메일, 전화, 문자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에게 이용 목적, 항목, 이용·보유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 확보
- 학원·교습소 등이 폐원하거나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지체없이(5일 이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 인쇄물은 파쇄 또는 소각, 전자적 파일은 정보 파기용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FAQ

학습자 개인정보 처리

Q1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입력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학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시간, 성명, 출결현황, 수료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 따른 의무 수행에 해당되므로 학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Q1-1

강의 동영상은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경우에도 회원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 회원가입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 외에 추가 서비스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는 선택동의 항목으로 동의여부를 가입희망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이후, 온라인 강의 수강 계약의 체결·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동의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2

학원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해도 되는 개인정보는 무엇 인가요?

답변) 수강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합니다.

-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학원법에 따라 수강생 대장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가정보(가정환경, 학교 성적, 입상 경력 등)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Q1-3**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수집하지 마세요.

-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 '16.12.31.까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 : '17.12.31.까지

Q1-4**퇴원한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퇴원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등의 증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표, 영수증 등)는 별도로 분리하여 해당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한 기간 동안(국세기본법 5년)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다른 목적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서(목적, 보유기간, 보유 항목 등을 고지) 처리하셔야 하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은 불가합니다.
- 또한, 행사 및 새로운 프로그램 안내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5**수강생 정보를 이용하여 학원 홍보물(동영상, 팸플릿 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 수강생들의 정보를 학원의 홍보용 카탈로그(또는 팸플릿)에 게시하거나,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수강생이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6

영어학원에서 수강생의 레벨테스트를 통해 반 편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 편성 결과를 학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도 되는지요?

답변) 수강생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수강생의 레벨테스트 결과는 가능한 직접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할 경우, 수강(접수)번호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수강생 본인만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 개인정보의 유·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Q1-7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 수강원서를 작성하며, 수강생의 전염병 감염여부를 수집할 경우 수강생의 동의를 얻어 수집해야 하는지요?

답변)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수집·이용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력 사항 등 건강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수집 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1-8

수강생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부모님의 직업, 학력, 종교 등을 수강원서 접수 시에 수집해도 되는지요?

답변) 학원교습에 필수적인 정보만 수집하셔야 합니다.

- 학원은 수강생의 교습을 위한 목적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수강생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학습자 능력 등 수강에 필요한 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합니다.

Q1-9

학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며, 학원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게시판을 운영 중, 질문하는 사람의 식별을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해도 되는지요?

답변) 식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수집가능합니다.

-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운영하기 위한 경우나, 메일링 신청과 게시판 글쓰기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은 할 수 없습니다.

Q1-10

학습자 주소록을 전화기 주변에 두고 신속하게 사용하여 할 경우가 많은데 잠그거나 비밀스런 곳에 보관해야하는지요?

답변) 학습자 주소록도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학습자(또는 보호자)의 이름, 연락처 등이 담겨있는 수강생 주소록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되고, 이와 같이 문서로 된 개인정보파일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꺼내어 사용하고, 그 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 다시 보관하여야 합니다.

Q1-11

퇴원한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여야 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퇴원 후, 5일 이내에 파기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증빙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전표, 영수증 등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보관하도록 한 기간 동안 정보주체 동의 없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현재 이용하는 파일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 또한, 행사 안내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관 및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목적, 보유기간, 보유항목,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강사·직원 개인정보 처리

< 주요 점검 사항 >

- 법령에 따른 강사 자격 확인
- 법령에 따른 강사 개인정보의 공개

※ 주로 직원·강사 개인정보처리 관련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으며,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 일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2015) 참고)

가. 채용예정자(강사)

-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강사 자격 소지여부 확인**

*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동의 불필요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에서 강사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수집·검증

－ (법률)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 (시행령)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으므로 동의 불필요

나. 재직자

- 근로기준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법령상 의무준수(직원 명부(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26>), 임금대장 작성 등)를 위한 직원·강사 개인정보 처리는 동의 없이 가능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연말정산 등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처리 가능
-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 제공을 위하여 가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 가족의 동의 불필요
 - * 자녀 학비 지원, 직계존속 건강진단, 주택지원 등 근로자 가족에 대한 혜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 제공(법령상 의무)으로 해석
 - * 가족관계 및 연령확인 등을 위한 증명서 제출 시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면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불필요
- 법령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로서 보관기간이 지난 정보 및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
 -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음(소득세법 제140조,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108조, 제113조 내지 제114조,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시행규칙 서식37 등)
 - 연말정산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해당 소득세 등의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 후 파기(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2항)
 - 복리 후생 제공 등의 목적으로 수집한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파기
-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사 정보 공개
 - 성명, 성별, 생년월일, 학력(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채용일

< 강사정보의 공개 방법 >

-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하며,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매월 1일 기준으로 게시
-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 추가 기록 참고

-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 및 변경 시 관할 교육감에게 강사명단 제출 (학원법 제6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직원 및 강사의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하여야 함

- 다만, 인사고과·연봉정보 등의 산출근거 자료 공개가 학원의 질서 유지 등에 영향을 미쳐 학원 및 다른 강사·직원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의 제한 또는 거절 가능

다. 퇴직자

□ 퇴직 강사·직원의 개인정보 파기 및 경력증명서 발급

- 퇴직한 강사·직원의 개인정보는 경력증명 및 근로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삭제
 - 근로자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 퇴직 후 3년간 별도 보관(근로기준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 퇴직 직원·강사 경력증명을 위하여 3년 이상 경력증명 정보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보관
 - *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동의를 얻기 힘들 수 있으므로, 입사 시 취업규칙 등에 안내하고 동의 받아두는 방법 활용 가능

- 보관 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 제공

- 제3자에게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정보 제공
- 순수 친목 목적으로 퇴직자 연락처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나, 학원·교습소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퇴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이나 단체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확보 필요

Q2

학원에서 강사 개인정보를 공개하여도 괜찮은가요?

답변) 강사의 학력, 소지 자격증, 주요 경력 등은 학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학원법에 따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주 출입구, 교습비 수납처 등)에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글씨 크기로 게시합니다.
-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온라인 콘텐츠만 제공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등의 정보는 의무적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Q2-1

강사·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답변) 임금지급 업무와 같이 관련 법령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처리가 금지됩니다.

- 연말정산 등을 위하여 국세청에 강사·직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5년간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의무 수행이므로 강사 및 직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2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불법체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학원법에 따라 외국어 교습을 위해 외국인을 강사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 포함),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을 검증하여야 합니다.

- 위의 내용은 학원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등에 의한 의무 수행이므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3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과 담당자의 PC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밀번호 설정,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방화벽 기능, 암호화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 관계자(관리자, 담당직원)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하세요.
 - 2자리(영문/숫자 등) 조합은 10자리 이상으로
 - 3자리(영문/숫자/특수문자) 조합은 8자리 이상으로 하세요.
 - 비밀번호는 적어도 6개월에 1번 이상 변경하세요.
 - ※ 비밀번호 설정은 컴퓨터의 '제어판' → '사용자 계정' → '암호변경'에서 가능
- 백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매일) 업데이트 하세요.
- 윈도우즈(Windows)등 운영체제에서 지원하는 방화벽(Firewall) 기능을 적용 하세요.
 - ※ 윈도우즈 방화벽 기능은 '제어판' → '시스템 및 보안' → 'Windows 방화벽'에서 적용 가능
- 회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은 안전한 암호 S/W를 이용해 암호화하세요.
 -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저장하세요.
 - ※ 기타 참고사항
 - 문의 및 연락처 : 국번없이 '☎118'
 - 참고자료 : www.privacy.go.kr 참고

Q2-4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가 따로 있나요?

답변)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아래 사항이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① 업무위탁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
 - ②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
 - ③ 위탁업무의 목적
 -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⑤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다는 것
 - ⑥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 첨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양식 참고

3.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 주요 점검 사항 >

- 공개된 장소(접수대 등)에서의 설치·운영 : 안내판 설치 등
- 비공개 장소(강의실 등)에서의 설치·운영 : 정보주체의 동의

가. 공개된 장소

- 학원·교습소 등의 복도, 계단, 접수대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받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는 불필요하나,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따른 주의 사항 >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 및 필요 최소한 촬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녹음 금지
- 안내판 설치를 통한 설치 사실 공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및 책임자 지정
- 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및 보관·파기 철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위탁 시 관리·감독 철저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및 자체 점검 실시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함

나. 비공개 장소

- 강의실, 강사 대기실 등 출입제한이 있는 공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필요
 - 학습자의 학습태도 관찰 등을 위해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학습자의 동의 필요
 - * 학원·교습소 등 등록 시 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동의 획득
 - * 단, 학습자를 촬영한 영상을 로비 등에 설치된 화면을 통해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용 외에 ‘공개’에 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하며, 불특정 다수에 의한 무단 수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강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강사 및 교재교구(학습자료, 칠판 등)만 촬영하는 경우 강사의 동의 필요

< 학원·교습소 등의 공개·비공개 장소 판단 기준 >

- 공개된 장소 : 접수대, 응접실, 현관, 복도 등 불특정 다수가 통제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 비공개 장소 : 강의실, 강사 대기실, 사무실 등 등록된 학습자 또는 강사직원만 출입이 허용된 장소

다. 열람 요구 대응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짐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임을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하였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인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 필요

FAQ

학원·교습소 등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Q3

고질민원 학부모 대응 등을 위하여 접수대에 설치된 CCTV의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 접수대는 일반인이 통제받지 않고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안내판을 통해 고지된 CCTV 설치 운영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도 안됩니다.

Q3-1

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까?

답변) 원칙적으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요건이 충족 되는 경우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협조요청만으로도 본인의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Q3-2

학부모가 자녀 출결 및 학습태도 확인을 위해 CCTV 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을 허가해도 되나요?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 교습자의 영상은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열람시키거나, 타 교습자들로부터 열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나 개인정보 처리자가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필요 조치를 취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3-3

피트니스센터 운영자입니다. 탈의실 입구에 신발 도난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없나요?

답변) 탈의실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나 신발장 등 탈의실 외부만 촬영하고, 내부를 비출 수 없도록 조치한다면 설치·운영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곳이라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CCTV 촬영 중임을 안내하시고, 출입이 제한 곳이라면 출입 대상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촬영하세요.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요약)

1. 학습자 개인정보 처리	2. 강사·직원 개인정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정보(학원법에 따른 수강생 대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 등)와 교습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는 동의 불필요 - 홍보·마케팅, 추가 서비스(특별과정 운영, 진학지도 등)를 위한 개인정보는 동의 필요 - 법령에 근거 없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 등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정보 수집은 동의 불필요 * 단,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는 동법에 따라 동의 필요 - 법령에 근거 없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처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제공 및 공개(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학원법에 따라 강사 성명, 학력(전공), 소지자격증, 채용일 등 공개(게시) 필요 ※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처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의 퇴원 및 학원 등의 폐원 이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 *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의 확보 - 다만, 개별법에서 별도 보관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기간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자 개인정보는 퇴직 후 3년 이후에는 파기하는 것이 원칙 * 보관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하여 동의 확보 - 다만, 개별법에서 별도 보관기간이 명시된 경우 해당기간 준수
3. CCTV 운영, 안전성 확보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대,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운영 시 안내판 설치 - 강의실 등 비공개 장소에서 CCTV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 동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처리 위탁(위탁에 해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외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포함, 문서로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소상공인 제외),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보관시설 또는 잠금장치 설치 등 -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거절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출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에게 고지, 단 1만명 이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시에는 행정자치부 또는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병행 	

〈붙임 1〉

학원·교습소 등 필수조치사항 “이것만은 꼭!”

1	<p>◆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강사 등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요구 * 홍보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필요 -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번호와 민감정보 수집 불가 -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별도 동의 필요
2	<p>◆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가 보관된 pc는 비밀번호 설정, 백신설치, 방화벽 기능 적용 등
3	<p>◆ 법령 근거 확인 또는 정보주체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및 학습자 개인정보는 법령근거 또는 동의를 얻어서 제공 * 미성년인 학습자의 학습내용 등은 친권자에게 제공가능
4	<p>◆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 공개, 운영방침 수립·공개 - 관리자 외 접근 통제 등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시
5	<p>◆ 학습자 퇴원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자 퇴원 시 해당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되 - 다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수집목적·이용기간·이용항목 등에 관하여 동의를 얻어 수집·이용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 홍보·마케팅 등 교습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다음의 양식 참고

_____ 학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_____ 학원은 학원 홍보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홈페이지, 현수막 등에 학원 성과 홍보
 - 학원 홈페이지 : www.△△△.co.kr
 - 현수막 부착 장소 : 학원 차량, 학원 벽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출신학교, 입학예정 (대)학교
 - * 필요 최소한의 항목으로 작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일('00.00.00.)로부터 1년
 - * 필요 최소한의 기간으로 작성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셔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없는 경우)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학원에서 제공하는 (예)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위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 학원 귀중

○○ 학원은

**범죄예방과 시설안전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설치장소 및 대수 : 출입구 X대, 복도 X대
 - ◎ 촬영범위 : 건물내부 출입구 근처 및 복도
 - ◎ 촬영시간 : 24시간
 - ◎ 관리책임자 : OO학원 원장 000(또는 OO과장 000)
- (전화 XX-XXX-XXXX)

〈붙임 4〉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¹⁾

- 1.
- 2.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²⁾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을
○○시 ○○구 ○○동 ○○번지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성 명 : (인)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5>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서 양식(예시)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OO 학원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붙임 6〉

개인정보 (열람/일부열람/열람연기/열람거절) 통지서 양식(예시)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 <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 <input type="checkbox"/>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수수료 산정 명세		원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임 7>

개인정보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예시)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 신 명 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학교교과 교습학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평생직업 교육학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 9>

학원강사 게시표

년 월 일 현재

일련 번호	성명	성별	연령	생년월일	학력 (전공과목)	경력	소지 자격증	채용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 사항을 위와 같이 게시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매월 1일 현재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합니다.
2. 학력은 고졸, 대졸 또는 대학원졸로 표시하되, 전공과목을 추가로 기록합니다.
3. 글씨의 크기는 학습자가 확인하기 쉬운 크기로 합니다.
4. 게시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합니다.(주 출입구 및 교습비등의 납부 장소 앞)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붙임 10〉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보호 관계 법령

구분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일반 원칙 제시
고용보험법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규정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규정
노인복지법	노인의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도로교통법	운전면허학원 설치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p>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한다.</p>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p> <p>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p> <p>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p>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p> <p>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이 증언, 진술 또는 감정(鑑定)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사항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p>②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보호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p>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p> <p>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3.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p> <p>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호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p> <p>②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5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p>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2.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3. 그 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⑥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⑦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8조(보호위원회의 기능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7.24.></p> <p>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p> <p>1의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p> <p>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p> <p>3.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p> <p>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p> <p>5.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p> <p>6. 제33조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p> <p>7.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p> <p>8. 제64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권고에 관한 사항</p> <p>9.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p> <p>10. 제67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사항</p> <p>1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대통령,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p>	<p>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8조(조직 및 정원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0조(보호위원회 등의 운영 세칙)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p> <p>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부문별 계획을 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부치는 사항</p> <p>1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p> <p>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p> <p>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p> <p>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시행일 : 2016.7.25.] 제8조제1항</p> <p>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p> <p>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시행일 : 2016.7.25.] 제8조의2</p>	<p>출발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4월 30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p> <p>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p> <p>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p>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시행일 : 2016.7.25.] 제9조</p> <p>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은 "법 제11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p> <p>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p> <p>[시행일 : 2016.7.25.] 제11조제1항</p> <p>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p> <p>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p>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p>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p>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8.6., 2014.11.19.></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p> <p>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p> <p>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p>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p> <p>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p>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8.6.></p> <p>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p>	<p>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p> <p>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p>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p>제20조 삭제 <2014.8.6.></p> <p>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p> <p>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p> <p>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p> <p>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p> <p>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p>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p>	<p>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p> <p>②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p>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13.8.6.]</p> <p>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p>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p>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p>④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해서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p>	<p>시설</p> <p>2.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p> <p>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p>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 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으로 본다.</p> <p>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p> <p>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수 있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p> <p>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p>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p>② 삭제 <2013.8.6.></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p>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p> <p>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④ 삭제 <2013.8.6.></p> <p>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p> <p>④ 안전행정부장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p> <p>[본조신설 2013.8.6.]</p> <p>[시행일 : 2016.1.1.] 제24조의2</p> <p>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p>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p>④ 법 제2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p> <p>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p> <p>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p>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p>	<p>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p> <p>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p> <p>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p> <p>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영업양도자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p> <p>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p>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p> <p>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p> <p>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p>	<p>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p>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p> <p>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p> <p>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p>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p> <p>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p> <p>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p>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p> <p>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p> <p>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p> <p>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p> <p>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p> <p>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p>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p>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p> <p>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영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법 제32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시행일 : 2016.7.25.] 제32조의2</p> <p>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p>인정보파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p>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p>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p>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p> <p>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p> <p>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p> <p>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p> <p>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p> <p>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p> <p>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p> <p>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p> <p>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p> <p>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p> <p>2.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p> <p>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p> <p>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p> <p>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p> <p>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1. 정관</p> <p>2.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p> <p>3. 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4.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5.7.24.></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11.19.></p>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11.19.></p>	<p>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p>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3.8.6.]</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p> <p>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p>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p> <p>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p> <p>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p>	<p>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p> <p>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p> <p>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p> <p>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p> <p>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p> <p>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p> <p>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p>	<p>② 법 제34조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p>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 및 이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p> <p>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p> <p>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② 삭제 <2015.7.24.></p> <p>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p> <p>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p>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p>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p> <p>④ 법 제34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4.8.6.]</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시행일 : 2016.7.25.] 제39조제3항, 제39조제4항</p> <p>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p> <p>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시행일 : 2016.7.25.] 제39조의2</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p> <p>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p> <p>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p>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p> <p>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p>② 정보주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법 제3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턴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p> <p>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p> <p>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p>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p> <p>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일 : 2016.7.25.] 제40조</p> <p>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p> <p>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 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 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p>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p> <p>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p> <p>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p> <p>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43조(조정의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p> <p>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p> <p>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제4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p>	<p>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의 요구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p> <p>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p> <p>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⑥ 제4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p> <p>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p>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p>	<p>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p> <p>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에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p> <p>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p> <p>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p> <p>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p> <p>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p> <p>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p> <p>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p> <p>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p> <p>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p> <p>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p> <p>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p> <p>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0조(사무국 등)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그 밖의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법 제40조제8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운영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관할에 전속한다.</p> <p>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p> <p>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p>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p>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p>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p> <p>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 	<p>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p> <p>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p>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p> <p>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p> <p>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p> <p>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p> <p>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p> <p>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p> <p>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p> <p>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p> <p>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p> <p>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p>	<p>다.</p> <p>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p> <p>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p> <p>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p>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p> <p>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 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p>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p>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보칙 및 벌칙</p> <p>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p> <p>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p>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61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 <p>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행정자치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p> <p>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p> <p>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p> <p>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p> <p>⑤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p>⑥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p> <p>⑦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7.24.></p> <p>제64조(시정조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p>	<p>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62조(권한의 위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제37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권한(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제62조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p> <p>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p>	<p>2014.11.1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p>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4.8.6.]</p> <p>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0조의2 및 별표 1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3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015년 1월 1일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66조(결과의 공표)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p>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3.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2015년 1월 1일</p> <p>4. 제52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 2015년 1월 1일</p> <p>5. 제63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p> <p>[전문개정 2014.12.9.]</p> <p>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6140호, 2015.3.11.> (보안업무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4조제4항제3호 중 "보안목표시설"을 "국가보안시설"로 한다.</p> <p>②부터 ⑤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벌칙</p> <p>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p>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p> <p>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p> <p>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p> <p>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p> <p>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p> <p>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p> <p>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4.></p> <p>1.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p> <p>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3.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p> <p>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5.7.24.]</p> <p>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6., 2014.3.24., 2015.7.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p> <p>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p> <p>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5.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p> <p>6.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p> <p>8.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9.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10.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p> <p>11.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2.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1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p> <p>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p> <p>3.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p> <p>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6.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한 자</p> <p>7.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p> <p>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p> <p>9. 제35조제3항·제4항, 제36조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p> <p>10. 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p> <p>11. 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p> <p>[시행일 : 2016.1.1.] 제75조제2항제4호의3, 제75조제2항제5호</p> <p>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13.8.6.]</p> <p>부칙 <제13423호, 2015.7.24.></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8조의2, 제9조, 제11조제1항, 제32조의2, 제39조제3항·제4항, 제39조의2, 제40조, 제75조제2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률 제12504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의2제2항 전단 및 제75조제2항제4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p> <p style="text-align: center;">[법률 제13423호, 2015.7.24.,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p>
<p>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제4항 및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개인정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자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개인정보 인증 심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p> <p>제5조(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위촉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본다.</p> <p>제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일부개정]
<p>제4조(고용보험사업) ①보험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고용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2.2.1.></p> <p>②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p>	<p>제43조(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수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12., 2010.7.12., 2010.12.31., 2011.9.15., 2012.1.13., 2013.12.24., 2015.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2.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4.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5.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피보험자 6.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피보험자 7.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피보험자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 <p>② 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p>
<p>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0.6.4.></p> <p>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p>	
<p>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거나 그 밖에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p> <p>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등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일부개정]</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2010.6.4.></p> <p>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0.6.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2.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려 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需給)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p>	<p>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4.></p> <p>③ 제1항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과정의 범위와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4.30., 2010.7.12.></p> <p>[제목개정 2013.12.24.]</p> <p>제46조(능력개발비용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 중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2.1.13.></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발, 지원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p> <p>제47조(취업훈련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창업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3.12.24.> 2. 삭제 <2013.12.24.> 3. 삭제 <2013.12.24.> 4. 삭제 <2013.12.24.> <p>②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훈련을 받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일부개정]</p>
	<p>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 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3., 2010.7.12.></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수강하는 피보험자이었던 실업자에게 해당 훈련비의 전부나 일부를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3.12.24.></p> <p>⑤ 제4항에 따른 대부 대상자의 선정, 대부절차, 대부횟수, 그 밖에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p> <p>⑥ 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실시기관이나 그 밖에 취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1.9.15.></p> <p>[제목개정 2011.9.15.]</p> <p>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제14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3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피보험자의 이직확인에 관한 사무

고용보험법 [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일부개정]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7. 법 제73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 18.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9. 법 제75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대위 신청에 관한 사무 20.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관한 사무 21. 법 제109조에 따른 조사 등에 관한 사무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고용보험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일부개정]</p>
	<p>22.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에 관한 사무</p> <p>23. 법 제112조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24.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 신고에 관한 사무</p> <p>25. 제10조에 따른 피보험자 이름 등의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p> <p>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1. 법 제62조·제74조·제77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구직급여 등의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p> <p>2.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p> <p>3. 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에 관한 사무</p> <p>4. 법 제44조에 따른 실업의 인정 등에 관한 사무</p> <p>5. 법 제48조 및 이 영 제71조에 따른 수급기간의 연기 등에 관한 사무</p> <p>6. 법 제52조에 따른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7. 법 제57조에 따른 미지급 구직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8. 법 제63조에 따른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9.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10. 법 제66조에 따른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11. 법 제67조에 따른 이주비의 지급에 관한 사무</p> <p>③ 심사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④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p>

고용보험법 [시행 2015.4.21.] [법률 제13041호, 2015.1.20.,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6.1.1.] [대통령령 제26690호, 2015.12.4., 일부개정]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1조제5항·제6항에 따른 심리조서 열람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1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0866호, 2011.7.2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p>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경력의 관리 및 직업능력개발과 자격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한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등이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2조(실업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실업자등”이라 한다)의 고용 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업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여성가장 또는 청소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삭제 <2010.5.31> 4. 삭제 <2010.5.31> 	<p>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과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훈련을 받는 사람을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개별 상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p>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10866호, 2011.7.21]</p>	<p style="text-align: center;">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p>
<p>5. 삭제 <2010.5.31>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직종(이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경제의 기간(基幹)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2. 정보통신산업·자동차산업 등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3. 그 밖에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p>②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의 선정기준 및 절차, 훈련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제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법률 제11013호, 2011.8.4]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15.8.11.] [법률 제13458호, 2015.8.11.,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5.7.1.] [행정자치부령 제29호, 2015.6.30.,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p> <p>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p> <p>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p> <p>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p> <p>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p> <p>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p> <p>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p> <p>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p>	<p>제105조(운전교육 수강신청 등) ①운전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05호서식의 수강신청서와 수강료를 해당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2 제1호 (주) 제4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등록증 사본 1부 2. 증명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4매 3. 운전면허시험응시표 사본 1부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p>②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신청을 받은 때에는 학사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교육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p> <p>③학원 또는 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 및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수강증과 별지 제108호서식의 수강료영수증을 교부하고 수강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8호, 2015.2.3.,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57호, 2015.8.3., 일부개정]
<p>제17조(회원 모집) ①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p> <p>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p> <p>③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회원모집 시기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모집시기 및 모집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모집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등록 체육시설업 :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 나. 신고 체육시설업 :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2. 회원모집의 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로 모집할 것. 다만, 회원탈퇴 등으로 결원된 회원을 보충하는 경우나 공개모집 후 정원에 미달된 회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다. 나. 회원을 신청한 자가 모집하려는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추첨을 통하여 회원을 선정할 것 다.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할 것 3. 회원모집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호가목의 경우 설치공사의 공정률이 50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모집하려는 전체 회원의 입회금을 합한 금액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당시 사업시설의 설치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원을 모집할 것 <p>제18조(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회원모집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체</p>
<p>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8호, 2015.2.3.,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57호, 2015.8.3., 일부개정]
<p>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p>	<p>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신고 체육시설업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등록 체육시설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p>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회원모집계획서와 그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제출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원모집계획에 따라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모집이 끝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회원모집결과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2)에 따른 제2종 종합휴양업 <p>제19조(회원의 보호)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8호, 2015.2.3.,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57호, 2015.8.3., 일부개정]
	<p>1. 회원자격의 양도·양수</p> <p>회원이 그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하려는 자가 제 17조제2호다목에 따른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원자격을 양수하는 자로부터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實費)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p> <p>2. 입회금액(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자격을 부여받는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모든 금액을 말하되, 회원으로 최초 가입하는 자가 회원에 가입할 때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제외한다)의 반환</p> <p>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시기 등에 관하여는 회원을 모집한 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되,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3.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을 정한 회원(이하 "연회원"이라 한다)에 대한 입회금액의 반환</p> <p>연회원이 회원자격의 존속기한이 끝나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입회금의 반환 여부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p> <p>4. 회원증의 확인·발급</p> <p>회원이 입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확인·발급하여야 한다. 회원자격을 양수한 회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p>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8호, 2015.2.3.,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8.4.] [대통령령 제26457호, 2015.8.3., 일부개정]
	5. 회원 대표기구 회원이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5.1.29.]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일부개정]	[시행 2015.11.26.] [대통령령 제26661호, 2015.11.26., 일부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p>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p>	<p>제14조(학습계좌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11.,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의 개설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p> <p>③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열람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④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⑤ 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⑥ 교육부장관(제4항에 따라 학습계좌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학습계좌에 수록된 정보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3.3.23.></p>

<p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법</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1.29.] [법률 제12339호, 2014.1.28., 일부개정]</p>	<p style="text-align: center;">평생교육법 시행령</p> <p style="text-align: center;">[시행 2015.11.26.] [대통령령 제26661호, 2015.11.26., 일부개정]</p>
<p>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p>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p> <p>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p> <p>제41조(학점, 학력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 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p>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31조에 따라 국내외의 각급 학교·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p>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0호, 2015.2.3.,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p> <p>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p> <p>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p> <p>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p> <p>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p> <p>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p> <p>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p> <p>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p> <p>사.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p>	<p>제5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삭제 <1999.5.10.></p> <p>② 법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원설립·운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학원의 명칭과 위치 3.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4. 정원 5. 강사명단 6. 교습비등 7. 시설과 설비 8. 개강 예정 연월일 <p>③ 제2항의 원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0.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원의 명칭 및 설립목적과 위치에 관한 사항 2. 수강자의 교습과정별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습과정 및 교습일시에 관한 사항 4. 과정 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교습기간 및 휴강일에 관한 사항 6. 교습비등에 관한 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0호, 2015.2.3.,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p>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p> <p>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p> <p>②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7.12.21.]</p> <p>제13조(강사 등)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p> <p>② 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p> <p>③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라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p>	<p>7. 그 밖에 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p> <p>④ 교습과정이 이론 교습과목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11.10.25.></p> <p>⑤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의 내용이 시설기준과 교육환경에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p> <p>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p> <p>[제목개정 2011.10.25.]</p> <p>제12조(강사) ① 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p> <p>[전문개정 2011.10.25.]</p> <p>제12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p>② 법 제13조의2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가 검증하여야 하는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본조신설 2011.10.25.]</p>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15.8.4.] [법률 제13120호, 2015.2.3., 일부개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1.1.]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p>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p> <p>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p>[본조신설 2011.7.25.]</p>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9호, 2015.3.27., 일부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49호, 2015.9.25., 일부개정]
<p>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으려는 교육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4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이 되는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 학습시설·학습설비, 학습과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p> <p>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p>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문화재보호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시행 2015.9.28.] [법률 제13229호, 2015.3.27., 일부개정]</p> <p>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p> <p>6.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傳授敎育)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③ 삭제</p> <p>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은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p> <p>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549호, 2015.9.25., 일부개정]</p> <p>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p> <p>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p> <p>[전문개정 2011.6.27.]</p> <p>제10조(학점인정 절차) ① 법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25.></p> <p>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학점인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확인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의 통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점인정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6.27.]</p>